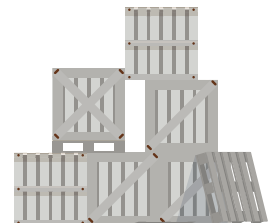


저비용 합판 사용 허가로 건축·포장업계 비용이 줄었어요!

수출 포장업체나 건축업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저비용합판(E2)은 국내 합판 유통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간 합판 규격·품질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유통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저비용합판(E2)을 합판 품질기준에 포함시키고 실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규정을 현실화했습니다.

또한 합판의 앞·뒷면에만 할 수 있었던 규격·품질표시를 옆면에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합판은 묶음 단위로 포장돼 수입하기 때문에 품질표시를 앞·뒷면에 하게 되면 추가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옆면 표기를 허가해서 합판업계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 건설업계 및 수출 포장업계,
연 5,894억원 부담 경감 예상



개선 전

국내 합판 유통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저비용 합판(E2)이 법적으로는 유통 금지

각 장의 앞·뒷면에만 합판 품질표시를 할 수 있어 묶음 포장된 합판을 일일이 풀어야 하는 불편 발생

개선 후

저비용 합판(E2)의 실외 사용 허가

합판의 옆면에도 품질표시가 가능해져 업계 비용 절감

‘합판 규격·품질 기준 고시’ 개정 (산림청, '14.4월)

공장 없는 제약회사, 글로벌 경쟁력이 자라는 요람이에요.

“국내엔 마땅한 제조업소가 없고, 국외 업소에 위탁할 수도 없으니 참 난감합니다.” 제약업체 O사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개발했으나 제조를 위한 시설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자 간의 의약품 위탁제조만 허용하는 규제에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이제 공장 없는 제약회사도 제약기술만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약물이 나오도록 하는 주사나 분말을 입으로 흡입하는 약, 세포독성항암제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약품(특수제형 의약품)에 대해선 해외 위탁 제조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에 국내 의약품의 연구개발이 촉진되고 제약회사의 초기 시설투자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 글로벌 의약품 기술을 초기 시설투자 (200~1,500억원) 부담 없이 상용화 가능



개선 전

국내제조업체 간 의약품 위탁제조만 허용

개선 후

특수설비가 필요하거나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특수제형 의약품에 대해 해외 위탁제조전문기업을 통한 제조를 허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식약처, '14.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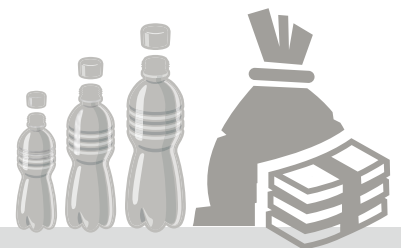
036

먹는샘물 병마개에 '증명표시' 부착의무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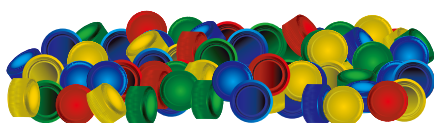
병마개 표시 의무 없어지니 매년 40억원 절감!

“굳이 필요도 없는 증명표시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S씨의 불만입니다. 이 업체는 먹는 샘물을 생산할 때 관리법에 따라 병마개 부분에 먹는샘물 ‘증명표시’를 인쇄하느라 과도한 인쇄비를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명표시로 괜한 인쇄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증명표시’ 부착의무가 폐지된 것입니다. 먹는샘물 병마개에 인쇄하는 ‘증명표시’는 판매량을 파악해 제조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장치지만, 부담금 부과 기준이 판매량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바뀌며 효용이 없어졌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 덕에 기업 당 매년 지출되던 인쇄비용 6,0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 65개 먹는샘물 제조업체,
약 42억원 비용 절감 예상



개선 전

먹는샘물 판매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병마개에 ‘증명표시’를 인쇄

개선 후

판매량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기준이 바뀌면서 무용해진
‘증명표시’ 부착의무를 폐지, 기업의 인쇄비 부담 해소

‘먹는물 관리법’ 개정 (환경부, '14.1월)

연구회, 장학회... 법인 설립 쉬워지니 좋다!

“도대체 왜 설립 허가가 안 됐냐고 물어봤더니, 허가해주고 말고는 주무관청의 자유란 대답만 돌아왔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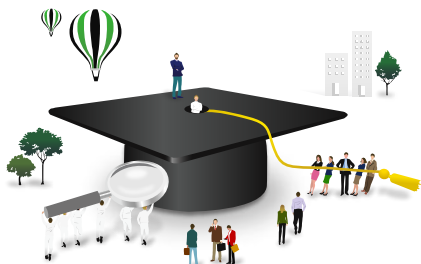
평소 기부를 생활화해온 C씨는 모교 후배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회를 설립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불허가 처분을 받아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C씨는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거절될 걱정 없이 장학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재량에 맡기던 법인 설립 허가주의가 폐지되고, 인가요건만 갖추면 설립 승인을 해주는 인가주의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연구회·장학회 등이 활성화되면 학술도 발전하고 기부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인설립 활성화 및 학술진흥·기부문화 활성화 등의 효과



개선 전

법인 설립 허가여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

개선 후

법령에 인가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인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 승인을 거부할 수 없음

‘민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법무부, '14.10월 제출)

산업단지 안에 캠퍼스가 들어온다!

A대학은 인근 국가산업단지 안에 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기숙사로 사용할 건물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기준 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 캠퍼스 설립을 오래 미뤄온 실정입니다. 그런데 규제 완화가 이뤄지며 A대학은 교지 확보의 부담 없이 캠퍼스를 조성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고자 할 때,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일부 소유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 개정으로 교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이 탄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 대학이전 부담완화를 통한 산학연 교류 · 협력 활성화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 운영 활성화 기대

— ('13) 설립 인가 11개교, 계획 승인 3개교 ➡

('14.9.기준) 설립 인가 14개교, 계획 승인 5개교



개선 전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기준 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해야 함

개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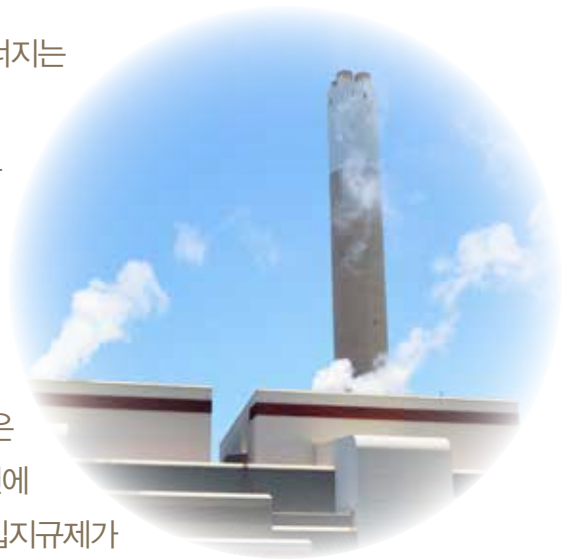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일부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됨

‘대학 설립 · 운영 규정’ 개정 (교육부, '14.2월)

10년째 하던 공장, 하루 아침에 나가요?

“10년째 운영해온 공장인데 이 지역에서 나가라니,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N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돼 더 이상 이곳에선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N씨의 공장이 특정물질을 배출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제 N씨처럼 공장을 잘 꾸려오다 갑자기 이전을 강요당할 일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입지한 공장이라면 특정물질배출이 허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입지규제가 유연해지며 기업의 부담이 해소됐습니다.



• 기존 입주한 사업장의 피해를 구제하고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



개선 전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입지를 제한

개선 후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지정 이전에 허가를 받아 입지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선 특정물질의 배출을 허용
(‘특별대책지역고시’ 및 ‘5개강 유역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고시’ 개정 (환경부, ’14.4월))

040

산업단지 내 식당, 어린이집이 함께 있는 복합구역제도 도입

직장, 식당, 어린이집이 한 곳에!

“공장 가까이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맘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을 텐데요...”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근무하는 J씨의 바람입니다. J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후 출근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원시설구역과 산업단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매일 긴 거리를 돌아 출근해야 합니다. 게다가 식사를 하는데도 큰 불편이 있습니다. 날마다 차로 20분 가까이 이동해 지원시설구역 내 식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이처럼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이 엄격히 분리돼 있고, 양 구역간의 거리가 멀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단 근로자들의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산업시설과 편의·문화시설 및 보육시설 등의 각종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구역’이 산업단지에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문화·교육·복지·여가 등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일터 근처에 생겨나면 산업단지의 활력도 커질 것입니다.



• 산업단지 내 공간 혁신 및 업종· 기능간 융합 활성화



개선 전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에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4개 구역만 존재해 구역별로 입주가 가능한 시설을 엄격히 제한

개선 후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에는 기존의 4개 구역 외에, 산업·지원·공공시설구역의 통합 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신규로 도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산업부, '14.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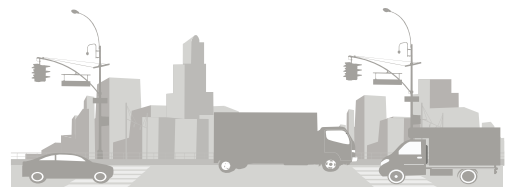
041

산업단지 주변 교통규제 완화 및 신호 연동화

상습 정체 해소! 통행 속도 향상!

“코 앞에 공장이 보이는데 멀리 돌아 유턴할 때마다 답답하죠. 시간은 없고 들러야 할 곳도 많은데...” ○○산업단지에 물건을 납품하는 S씨는 매일 거래 공장 앞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유턴 허용구역까지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돼 거래 공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 허용구역이 생겼고, 매일 10분의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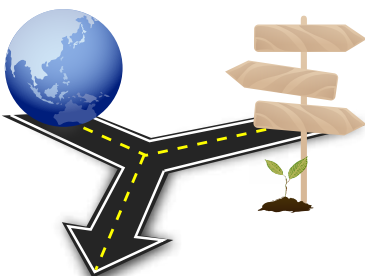
그동안 교통안전을 이유로 많은 곳에서 일률적으로 좌회전·유턴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장밀집 산업단지엔 보행자가 거의 없고 트럭이 주로 통행하는 등 산업단지만의 특성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교통량 및 통행속도를 분석해 좌회전·유턴 허용구역을 늘리고, 신호도 연동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

대폭 경감

상습 정체 해소, 통행속도 향상 등
경제적 효과 창출



개선 전

산업단지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교통 규제

개선 후

산업단지 주변의 경우 교통량, 도로 여건에 따라 좌회전 및 유턴을 확대하는 등 교통 회전 규제 완화, 신호 연동화

‘산업단지 주변 교통회전규제 완화 및 신호연동화’ 공문 시달 (경찰청, '14.4월)

문의 :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0610)

042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가능

택시업계의 숨통이 트인다!

“그대로 있자니 비싼 임대료에 숨이 막히고, 저렴한 곳을 찾자니 규제에 막히고… 정말 갈 곳이 없군요.” 택시업체 대표 C씨의 하소연입니다. C씨가 운영하는 택시회사는 주택지 인근에 위치한 택시차고지를 임대해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로 경영난이 가중되자 차고지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막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제 C씨의 숨통이 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전 많은 중소 택시업체가 차고지 임대료 부담 없이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택시업계의 차고지 임대료 부담 완화로 경영여건 개선



개선 전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불가

개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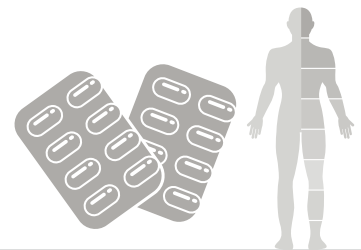
택시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입지확보가 용이한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14.4월)

건강기능식품에도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전문업체 C사는 최근 어린이의 키 성장을 돕는 기능성 원료를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란 점에서 국가가 이를 인정해줄지를 예측할 수 없기에 적극적인 연구개발이나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능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금지사항 이외엔 모든 기능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되며 이에 따라 C사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기능’과 ‘심리적·신체적 의존의 우려가 있는 기능’ 이외엔 모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새로운 원료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면,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 및 관련 투자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일자리 창출효과(예상) : 61,560명
(‘11년 1.4조 ➡ ‘17년 5조 : 3.6조 증가,
음식료품 제조업 부문 ‘11년 취업유발계수
10억당 17.1명 적용시, ‘13.한은)



개선 전

기능성 인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로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발생

개선 후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기능, 성적 호기심·충동·행위 등 심리적·신체적인 의존의 우려가 있는 기능 이외에는 기능성으로 인정하도록 범위 확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최동익 의원, ‘14.9월 발의)